

# 물가안정 협조 RPC 벼 매입자금 추가지원 철회 건의안

의안  
번호

1310

발의일시: 2011. 9. 6.

발 의 자: 양승모 의원

## 1. 제안이유

농림수산식품부의 “물가안정 협조 RPC 벼 매입자금 추가 지원 계획”은 물가안정이라는 명목 하에 농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책이며

벼 매입자금 이용한 RPC 길들이기와 인위적인 쌀 가격 통제 정책이 농업기반 붕괴를 부채질 할 것이 심각하게 우려되어 이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농협중앙회장, 사)RPC협의회장에게 건의

## 2. 주요내용

- 가. 정부는 RPC 벼 매입자금 추가지원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농민들에게 사과할 것
- 나. 정부는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농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 수매제 도입 등 농촌경제 붕괴를 방지할 정책을 수립할 것
- 다. 농협중앙회와 RPC협회는 시장 자율에 역행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거부하고 쌀 생산비를 보장할 것
- 라. 식량안보 위기에 대비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업경영 안정을 위해 공공 비축미를 확대 할 것
- 마. 쌀을 소비자 물가지수 산정품목과 정부의 물가안정 중점관리 품목에서 제외할 것

## 3.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 4. 붙임 : 건의문 1부.

## 농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물가안정 협조 RPC 벼 매입자금 추가지원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10년 쌀 판매가격을 3% 이상 인하한 RPC에 수확기 대책자금 중 1천억을 지원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물가안정 협조 RPC 벼 매입자금 추가 지원 계획”은 물가안정이라는 명목 하에 농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책이다.

더욱이 벼 매입자금 지원금리를 가격인하율과 정부정책 호응 여부에 따라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은 정책자금을 수단으로 해서 일선 RPC를 통제하려는 의도이다.

우리는 물가불안이 국가경제와 서민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을 충분히 알고 있고, 물가를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그러나, ‘쌀’은 예외이다.

2005년을 100으로 했을 때 2011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2.5인데 이중 쌀은 102.8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생활물가지수 구성 152개 품목 중 쌀값의 물가상승 순위는 136번째에 불과하다.

평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쌀은 소비자물가 상승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물가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마치 쌀이 물가인상의 주범인양 쌀값 인하로 물가를 잡겠다는 발상은 정부의 물가정책 실패를 힘없는 농민들에게 전가하려는데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그동안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에 따른 농민들의 고통은 외면한채

물가안정 명분으로 공공비축미를 저가로 방출하는가 하면, 이제는 아예 쌀값을 인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강제로 나락으로 떠미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벼 매입자금은 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수급조절을 위한 자금이다. 이러한 정책자금을 쌀값 하락을 유도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벼 매입자금을 이용한 RPC 길들이기와 인위적인 쌀 가격 통제 정책이 농업기반 붕괴를 부채질 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유발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RPC 벼 매입자금 추가 지원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 정부는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농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수매제 도입 등 농촌경제 붕괴를 방지할 정책을 추진하라!
3. 농협중앙회와 RPC협회는 시장자율에 역행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거부하고 쌀 생산비를 보장하라!
4. 식량안보 위기에 대비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업경영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확대 등을 추진하라!
5. 쌀을 소비자물가지수 산정품목과 정부의 물가안정 중점관리 품목에서 제외하라!

2011. 9. 6.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

1608